

# 차기 총장 선출 제도에 '구성원 투표' VS '총선위' 격돌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법인소위원회 개정안)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최명규 기자 gymyeong@khu.ac.kr

차기 총장을 선출할 새로운 제도를 두고 대학평의원회(대평의)와 법인의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의 갈등은 지난 8월 7일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의 결렬 사태의 파장으로 한 때 최고조에 달했다. 대평의와 법인이 차기 총장은 새로운 제도에서만 선출·임명하자고 공언한 가운데,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가 결렬 사태를 맞아 8월 29일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총장 선출제 개정도 무산됐다.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는 대평의와 법인이 지난 5월 25일 '차기 총장, 새 제도' 원칙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7월 5일을 시작으로 대평의와 법인은 7월 한달 매주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를 이어왔다. 대평의는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의 시작과 동시에 전체 구성원 투표 방식을 채택한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도입을 법인에 제안했다.

하지만 법인 또한 지난 7월 12일 총장후보 선임위원회(총선위)를 골자로 담고 있는 총장선임법인소위원회(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대평의와 법인은 각각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과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학내 일각에선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리고 8월 7일 총장선출제 실무회의는 결국 대평의의 결렬 선언으로 치달았다.

결렬 사태 이틀만인 지난 8월 9일 대평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법인을 규탄하며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즉각 수용을 법인에 요구했다. 법인은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결렬 사태 나흘 만인 지난 8월 11일 학교법인 경희학원 공영일 이사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결렬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구성원과 법인이 다시 만나 관련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 이사장은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수용에 대해 "관련 논의 재개를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정도로 선을 그었다. 8.7 결렬 사태 이후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는 재개되지 않았고 지난 8월 29일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총장 선출제

개정마저 무산되는 수순을 밟았다. 대신 이날 법인 이사회는 총장 선출제 개정 권한을 공 이사장과 법인소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했다. 개정 무산 일인인 8월 30일 공 이사장은 대평의와 면담에서 조인원 총장의 4선 포기 의사를 밝혔다. 또한 30일 대평의와 법인은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를 9월 초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과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모두 '총장후보추천→총장후보압축→이사회최종선임' 3단계 구조를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가 '총장후보추천' 단계를 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총추위는 구성원 대표 26명과 법인 이사 4명 모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 대표 26명은 다시 교수 대표 14명과 직원·학생·동문 대표 각 4명으로 이뤄진다. 총추위는 후보자 공모와 결격자 판별을 통해 총장 후보를 추천한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은 3~5명의 총장 후보를,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6명의 총장 후보를 추천한다. 총추위가 '총장후보추천' 단계를 마무리하면 총장 선출 과정은 '총장후보압축' 단계에 접어든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과 법인소위원회의 개정안의 차이점은 '총장후보압축' 단계에서 나타난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은 전체 구성원 투표를 통해 총장 후보를 압축하는 반면,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총선위를 통해 총장 후보를 압축한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에 따르면 총추위가 추천한 총장 후보를 두고 전체 구성원 투표를 시행한다. 표결 결과 최다 득표 2인이 최종 총장 후보로 낙점된다. 교수와 직원은 직선제로, 학생과 동문은 간선제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권 비율은 교수:직원:학생:동문이 각각 14:4:4:4이다. 최다 득표 2인 중 한 명을 법인 이사회가 우리학교 총장으로 선임한다.

반면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구성원 대표와 법인 이사회가 동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총선위가 '총장후보압축' 단계를 맡고 있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이 채택하고 있는 전체 구성원 투표 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총선위는 구성원 대표 5명과 법인 이사 5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원과 법인이 5대5 동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

는 구조다. 총추위가 추천한 총장 후보를 두고 총선위가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 3명을 뽑는다. 이후 법인 이사회가 3명 중 1명을 우리학교 총장으로 선임한다.

전체 구성원 투표와 총선위는 대평의와 법인이 이번 차기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의 범위를 바라보는 온도차를 보여준다.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은 전체 구성원 투표를 통해 '총장후보압축' 단계까지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보장을 주장하려는 반면,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총선위를 통해 '총장후보추천' 단계에 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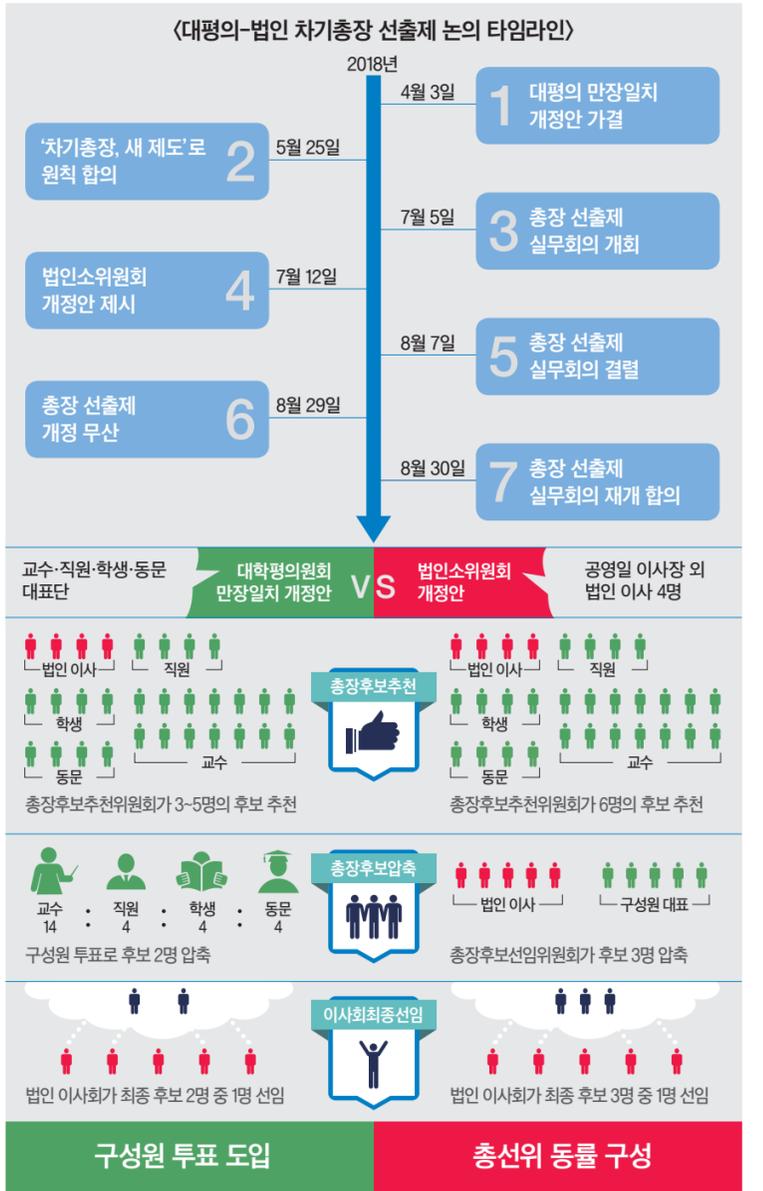
대평의는 총장 선임의 최종 권한이 법인 이사회에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 총장후보 압축 단계에서까지 의결권 절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총장 선출 과정 전반을 법인의 영향권에 넣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대평의 이성근(교수의회) 의장은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를 형식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간선제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대평의 김종현(노동조합) 위원 또한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의 총선위를 두고 "구성원 대표와 법인 이사가 1대1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며 "법인 이사가 구성원의 뜻과 어긋나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제도적 권한이 전무한 제도"라고 말했다.

법인은 총장후보압축 단계에서 전체 구성원 투표 방식을 채택한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이 대학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법인 공영일 이사장은 "전체 구성원 투표 방식을 도입한 많은 타 대학에서 총장 선출 전반이 정치화돼 있는 상황을 우리대학이 따라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평의는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투표하는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은 정치적이고, 법인 이사들이 불박이로 참여해 기득권을 행사하는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비정치적이라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법인소위원회 개정안은 '포스코'가 출연해 설립한 포항공대의 총장 선출제와 비교해볼 수 있다. 포항공대의 총장 선출 과정은 총장후보추천과 이사회최종선임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법인 이사가 구성원과 동물로 가깝게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에선 법인소위원회 개



정안과 유사하다. 총장후보추천 단계에 참여하는 총 9명의 위원 중 4명은 포항공대의 법인 이사다.

한편,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구성원 모두가 선거를 통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화여대가 지난 4월 새로 개정된 총장 선출제와 유사하다. 이화여대에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최경희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차기 총장 선출 과정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학내 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전체 구성원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마련됐고, 학내 민주주의를 일궈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다. 다만 투표권 비율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7.5%로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53.8%가량)과 비교해 현저히 높다.

## ▶1면에서 이어짐

글쓰기2가 개편된 '주제연구'는 맞춤형 학습 및 연구를 통해 심화학습의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의 관심 주제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개인 혹은 그룹으로 연구해 소논문 작성하는 등 연구역량을 키우는 학습이 주된 내용이다.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전환을 위해 강좌 수는 늘리고 강좌 당 학생 수는 줄인다. 빅문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성찰과 표현, 인가탐, 세계와 시민, 주제연구)의 강좌 수는 과목별로 서울캠 70강좌, 국제캠 60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캠은 기존 강좌 수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제캠은 1년 기준으로 약 35강좌가 늘어난다. 강의, 발표, 토론, 글쓰기를 병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이다.

점수 위주인 평가는 역량 중심평가로 전환해 학점 지상주의 탈피를 목표로 한다.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수평가 등이 있으며, 학점은 P/F 방식이나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평가방식 개편은 2018년 2학기 시범 실시를 논의 중이며 2019년 1학기부터 전면 실시 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를 위해 '역량평가지표'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행동특성을 도출해 측정 가능한 행동지표로 개발함으로써 개인별 수준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역량



2017년 서울캠에서 열린 후마니타스 공청회에서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이 재도약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향상을 지향하는 지표이다. 복합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인적자원 관리능력, 협업 능력, 감성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적 유연성 등이 포함됐다. 각 과목마다 해당하는 역량 몇 가지를 채택해 평가에 활용하며 배분·자유 이수 영역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수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배분·자유 영역도 '창의교양', '토대교양', '미래교양' 세 분류로 개편한다. 창의교양

은 상징과 평화, 사회와 문화, 생명과 우주, 분석과 기술 주제를, '토대교양'에는 인문 토대, 사회토대, 자연토대 주제를, '미래교양'에는 소프트웨어, 취·창업 역량 주제를 담았다. 주제에 맞춰 기존 교과목의 재편 및 개편을 진행 중이며 필수교과와 연계되는 심화학습 교과목을 개발할 예정이다.

필수과목이 5과목으로 줄어들면서 배분 이수에서 다른 교과목을 추가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임시로 '인식과 사유방법'이라

이름 붙여진 이 과목은 온라인 수업과 강의실 수업을 병행한다. 일주일에 두 번, 15분 분량의 온라인 수업에서는 특정 전공을 쉽게 설명하고, 75분 간 강의실 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이 과목은 정원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 중이다.

배분·자유 이수 영역 교과목 공모 및 강사 공채도 계획 중이다. 미래학, 전환 설계, 기후학, 사회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염두하

고 있으며 시대 흐름에 맞는 참신한 교과목 발굴, 신진학자영입이 목표다.

전공과목 교양학점 인정도 논의 중이다. 국제캠 후마 김성수 학장은 "자신의 전공 과목이 아닌 교과목을 교양으로 수강할 경우 높은 학점을 받기가 어렵다"며 "학점 부담이 적어진다면 학생의 교양과목 선택폭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실행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사지원과, 정보처 등 행정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강신청제도도 논의 중이다. 학생이 가진 후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수강신청의 어려움이고 선착순 수강신청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후마 측의 입장이다. 실행위원회 우기동(지구사회봉사단) 팀장은 "선착순 방식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마는 개편의 수월한 진행을 위해 교과단위 분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학생 위원도 포함된 분과 위원회는 2019년 2월까지 활동하며 주제선정, 교재 개발, 강의 및 학습 방법 개선, 역량 중심 평가지표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방식이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학생의 학습 역량이 길러지고, 교육이 지속적으로 남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라고 후마 전면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강조했다.